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들의 생명운동

1. 진오비와 낙태근절 선포식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근절 및 태아 생명보호'라는 취지에 동감하는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생명운동을 하는 종교단체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일반 국민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생명운동단체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진오비의 낙태근절 운동본부가 그 전신이다.

진오비(Gyn-OB,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이하 산의회, 전 대한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집행부의 전횡으로 인해 더 이상 산부인과 의료 환경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680명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당시 산의회 간부였던 심상덕 원장과 최안나 원장 등을 주축으로 하여 산의회를 박차고 나와서 만든 단체로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낙태수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 본연의 자세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산부인과 의료 환경 개선도 얻어 낼 수도 없다는 각성 하에, 2009년 11월 1일 낙태근절 선포식을 개최하여 진오비의 입장 표명과 함께 불법낙태수술 병원에 대한 고발조치 계획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지난 40년간 천주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 단체 외에 누구도 언급하지 못한 채 파묻혀 있던 낙태문제를 끄집어내어 정식으로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차희제 토마스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또한 진오비는 부속기관으로 '낙태근절 운동본부'를 두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했으나 동참한 산부인과 의사들 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결국 동료고발이라는 초 강경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낙태근절운동의 참여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2. 프로라이프 의사회 출범

그리하여 끝까지 남은 뜻있는 의사들이 새롭게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출범시키고 각 종교별 생명운동 단체들과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생명운동을 해왔던 1세대 생명운동 그룹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2010년 1월 거국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1월 중에 회장단과 운영진이 선출되었고,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위촉되었으며 분야별 4대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각의 위원장을 두었다. 이 중 고발과 관련된 실무는 윤리위원회에서 맡기로 하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3대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의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국민 모두를 총망라하여 프로라이프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최초의 사회운동단체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을 사실상 '낙태근절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전방위적인 낙태근절 운동을 활발하게 시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종교단체들과 그 뜻을 함께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적 생명운동과는 구별되는 생명과학과 성윤리,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프로라이프 운동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 불법낙태 제보센터, 구조센터 운영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고발을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불법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는 낙태 제보센터와, 부당하게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건강과 이유 없이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는 목적으로 낙태 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다.

● 불법 낙태시술 병원 고발

2010년 2월 초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제보센터에 제보된 사실에 근거하여 가장 확실한 고발사유가 된다고 판단된 산부인과 대형병원 2곳과 낙태시술 불법광고를 낸 낙태전문 프랜차이즈 병원 등 3개 병원을 고심 끝에 선정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을 주도했다. 이렇게

동료의사 고발이라는 초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방법 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상 낙태를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 개최

불법시술 병원 고발 건으로 형성된 강경하고 독단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3월 24일 조계종 불교 역사관에서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친근한 이미지의 의사회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 자리에서 '낙태 근절 5대 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낙태 근절 100만인 서명운동' 개시를 선포하여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낙태근절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가두 캠페인

낙태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과제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완수하기 위해 각 종교별로 협조를 구하고 가두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고 우리의 뜻과 취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천주교 뿐 아니라 개신교 계열의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명운동에 앞장서 주고 있으며 각 성당과 교회에서도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주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내에 서명운동본부를 두어 전국에서 수거된 서명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많은 서명지가 꾸준히 답지하고 있다.

● 낙태법 양형기준 제정 청구(대법원) 및 2차 불법낙태 병의원 고발 결의

사법부가 지금과 같은 코걸이-귀걸이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그만 두고 낙태죄에 대한 실행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또한 사법부가 적법한 낙태죄 판결을 할 때까지 제보된 사실에 근거하여 현행법상 불법낙태시술을 시행한다고 판단된 산부인과 병원 및 의원급까지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 국회 토론회 패널 참여, TV & Radio 방송 토론프로 참여 및 인터뷰, 신문 잡지 컬럼 기고 등

3. 낙태 합법화 추진 세력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가 주도하는 의사단체와 진보적 여성단체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서 낙태 합법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앞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유'의 법적 수용이다.

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이 낙태수술의 96%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이유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거의 전부가 불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의사단체가 앞장서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일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치스런 일이며,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몰지각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는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 행복권을 위한다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속으로는 합법적으로 '원치 않는 생명을 죽여주는 멧가'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온갖 이유를 붙여서 멸절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사고방식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의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남들 보기에 낫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 목소리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인 여성주의자들이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마치 전체 여성계를 대변하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이 정말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여권주의 신장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된 논리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다.

만약 저들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망쳐 버리는 낙태수술의 끔찍한 실체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낙태의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저런 식의 무 개념적인 주장을 더 이상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날개를 달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낙태를 결정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수술을 받는 세상이 오더라도, 여성 인권이 존중받고 여성 건강이 보호되는 행복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 프로라이프 연합회 결성 추진 및 낙태 합법화 시도 강력 저지 운동

얼마 전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 삭제, 보호감호법 부활 등을 제안하면서 형법으로서 낙태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신 8주까지는 완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 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2주까지는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모 의대 교수는 '낙태를 합법화하면 오히려 생명정시풍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일부 법대 교수들까지 합세하여 '기간제 낙태 허용'이라는 묘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눈 감고 아웅 식의 완전 합법화 시도를 서슴없이 떠들고 있다.

이젠 아예 내놓고 낙태 합법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부 낙태찬성론자들의 궤변은 참으로 듣고 있기가 민망하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어 한 생명을 죽여도 될 만한 대단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소중한 가치라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더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태아를 죽여도 되는 가치'라는 것들이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포장된 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애 키울 시간과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애 낳기 싫어서, 출세에 지장이 되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뱃속의 자기 아기조차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없애 버릴 수 있다는 반생명적, 비윤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변호사, 교수 등의 각 전문분야별 프로라이프 단체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이들의 힘을 한데 모아 프로라이프 연합회를 결성하여 동시다

발적 혹은 집단적으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당당히 밝히고 저들의 간교한 낙태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맞대응을 할 생각이다.



김해숙 선생님과 함께



임원회의 후 산동에서



토론회 후 이등욱 선생님과 함께

5. 검찰의 단속의지 결여와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

불법시술 병원 고발 이후 4개월이 훨씬 지난 어느 날 고발당한 한 병원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검찰의 조사 결과 자신의 병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서 그로 인한 명예훼손과 함께 심적, 물적 피해가 심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명확히 사과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일은 검찰이 낙태죄 수사에 관한 한 이상할 정도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했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 약식 기소, 불구속 입건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으로써 불법낙태시술 병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로 인해 현행법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호소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오히려 불법시술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법부가 현행법을 집행하려 할 때에 그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 예외 없는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주위의 눈치를 살피거나 이해당사자인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말의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 아무리 지난 판례와의 형평성 여부를 논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어느 한 검사나 판사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현행법의 엄정한 법집행이 훼손되거나 왜곡된다면 그것은 실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영망진창으로 만드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일종의 범죄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고발 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얼어붙어있던 낙태 현장은 결국 법적으로도 별 것이 없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너도 나도 고발 전의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낙태수술이 사실상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재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6.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발 건 이후 3월 2일자로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으나 역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여론 무마용 대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렵사리 낙태가 공론화된 이 중요한 시기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또 다시 예전의 비효율성을 고스라니 답습한 중장기적 대책이라니?!

이 말은 현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 상태 그대로 가자는 뜻이다. 이는 낙태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응당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의사와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살을 깎는 심정으로 간신히 수면 위로 끌어 올렸던 낙태문제의 공론화와 낙태 줄이기 운동은 정부와 검찰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서 다시 그전 자리로 원 위치하게 되었다.